

산업부, 탄소중립 비용 부담 낮춘다 설비투자 등 2500억 규모 사업 추진

K-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저리융자 등 다양한 유형 사업
설명자료 제작... 접근성 개선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신

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 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헤어져 있

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성환 “사람·자연 공존하는 사회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재생에너지·재난대응 등 과제 점검
김 장관 “소중한 환경 가치 높여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기수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계획 및 수상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기후재난에 대비해 발전용 댐, 저수지, 하구둑 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산업 신생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도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살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다. 또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지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기후부 보고에서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류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설 앞두고 부정 유통 선제적 차단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

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홍문표(가운데) aT 사장이 13일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찾아 파프리카의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aT

홍문표 aT 사장, 지역본부 사업성과 점검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

제해조류박람회과 연계해,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협력 강화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소재 파프리카 수출업체 농업회사법인(주)농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동절기 파프리카 작황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사장은 전북지역본부 직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농가 소득강화 등 10대 과제 성과 창출”

송미령 장관 “국민 목소리 반영 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시한 농정 기조를 현장 정책고객 앞에서 ‘실행 단계’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

한 10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올해 두 차례 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수요자인 국민·농업인·업계·지자체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과정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보고는 형식적인 정책 나열이 아니라 ‘체감 성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비롯해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AI 스마트농업 확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청년 농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농촌 활력 제고, 동물복지 강화, 축산업 구조개선 등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직접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업 분야 AI 전환 등 신규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과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권익위, 도원아파트 재산권 행사 길 열어

창녕군청서 현장조정회의 개최

(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제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시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